李, 경선결과 전격 수용… '특별당규 해석논란' 수면 아래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與 당무위, 이낙연 이의신청 기각
"향후 해당 당규 명확하게 개정"

이낙연, SNS 통해 승복 선언
"반드시 4기 민주정부 이루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가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했다. 이낙연 후보는 13일 승복 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이루자"며 "기필코 대선에서 이기자. 여러분과 함께 강물처럼 끈기있게 흘러 바다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무위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SNS을 통해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을 지지한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다"며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한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 주신다"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선 경선 최종발표 이후 결선투표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낙연 후보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칩거에 들어간 이낙연 후보와 달리 이낙연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연일 결선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 제59조1항과 제60조1항의 해석 문제를 놓고,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무효표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상위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13일 국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당무위원 총 64명(76명 중 현장 참석 49명, 서면 15명)이 참석해 시작된 당무위는 국정감사가 치러지는 와중에도 오후 3시 10분까지 이어졌다. 이낙연 후보 측이 주장한 특별당규의 유권해석을 놓고 팽팽한 주장이 오갔으나 결국 이 후보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며 박수로 추인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결과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관위와 최고위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며 "다만 해당 당규에 대한 조항이 결선투표가 도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라 향후 해석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개정한다는 의결 주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당규 제59조1항과 제60조1항을 비롯해 특별당규 일부 규정은 향후 전당대회를 통해 개정될 전망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집중공세에 방어, 또 방어… 尹,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유승민·홍준표·원희룡 공세 잇따라
윤석열 방어 태도 놓고 시각 엇갈려
"리더십 있어" vs "캠프 관리 미흡"

윤석열 전 총장이 1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참아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힘 대권주자 3인방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발언과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상대 후보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쟁 후보들의 공세를 뚫고 윤 전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지는 앞으로 남은 여러 토론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표적인 경쟁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의 무속 논란에 대해 "미신, 주술, 사이비종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란 자리는 공적 자리 중에서도 공적인 자리"라며 "일반 시민들이 무속이나 사이비 종교를 믿는 건 자유지만 대통령은 과학과 합리, 상식의 영역에서 판단해야지 이런데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외교·안보 공약을 타깃 삼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 측 외교·안보 공약인 ▲나토(NATO)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등을 두고 미국 측에서 반박한 데 대해 "공약을 번복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번복하지 않았고, 원래 제 입장이 그렇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도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핵 협상이 잘 안되고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에게 "평생 살면서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가난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이경 대변인이 지난 7일 SNS에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올린 뒤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 사진을 보며 생각은 각자의 그릇만큼"이라고 말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저희가 자랄 때는 나라가 어려워서 도처에 가난한 친구들 천지였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러 토론에서 경쟁 후보들과 답변을 주고 받는 윤 전 총장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 신인 치고 국민의힘 보수 진영 대표 주자로서 설 수 있는 리더십은 있다"며 "경력이 많다고 홍 의원, 유 전 의원이 '반문(反文)'의 상징이 되기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기관리능력이라는 것은 캠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캠프에서 현안에 대해 후보 입장까지 정리해 보고서가 올라가야 하는 사항"이라며 캠프 측 메시지 관리 상황을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자질을 갖춰야 위기관리능력도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측 메시지 관리능력을 겨냥해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미, '한·미·일 삼국 공조' 공감대 형성

한미 양국 안보실장 만나 협의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 시각도

한·미·일 삼국 공조가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한 가운데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다양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구체적인 대북 문제 해결에도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안보 당국이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진전된 한·미·일 협력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재자'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 안보당국 협의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출범 기회에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이 있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냉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축하 서한을 보냈지만, 답신은 없고 첫 정상 통화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전 총리와는 취임한 지 8일 만에 문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도 부임한 9개월 동안 일본 총리와 외무상을 면담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떠나는 도미타 고지 전 주한대사를 접견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도 '미국이 중재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한·일 관계는 좋은 상태가 아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역사적인 문제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상임고문단 만난 이재명 "4기 민주정부 창출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 상임고문단을 향해 "개인의 승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당 원로 고문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 자리를 갖고 "내년 대통령 선거는 특정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의 승리가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 때문에 고통스럽고, 특히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이 경쟁을 격화시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명확하게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불이익 받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기회가 넘쳐나는 성장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부족한 것이 많은 저에게 이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뚜렷한 성과로, 새로운 변화로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송영길 대표는 "특정 계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실력과 성과로 평가를 받아왔던 이재명 후보의 선출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대변한 것"이라며 "모든 분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시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고, 상임고문님들의 지혜를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정익 기자